

# 소득보장 강화 vs 재정안정 딜레마... “퇴직연금 차선책”

野, 노후소득강화 퇴직연금 토론회  
정창률 교수 “준공적 연금 역할해야”  
자영업자·1년미만 근속자 등 한계



연금개혁에서 소득보장 강화와 재정안정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이룰 수 없는 딜레마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에서 25일 퇴직연금제도를 활성화해 촘촘한 노후 소득 보장 체계를 구축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에서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노후소득강화를 위한 퇴직연금 활용방안’ 토론회 기념사진 촬영 장면. /박태홍 기자

연금개혁에서 소득보장 강화와 재정안정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이룰 수 없는 딜레마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에서 25일 퇴직연금제도를 활성화해 촘촘한 노후 소득 보장 체계를 구축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에서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노후소득강화를 위한 퇴직연금 활용방안’ 토론회에선 퇴직연금 활성화를 둘러싼 쟁점과 개혁방안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기존 퇴직금 제도에 더해 지난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은 기존 퇴직금과 같은 계산(최종 3개월 평균급여×근속년수)으로 퇴직급여가 결정되는 DB(확정급여)형, 근로기간 납부한 보험료와 투자 수익으로 퇴직급여가 산정되는 DC(확정기여)형으로 운용하고 있다. 쉽게 말해 DB형은 원리금을 지키려는 근

로자, DC형은 투자로 적립금을 불리려는 근로자가 선택한다.

2021년 퇴직연금통계 결과에 따르면 고용 규모가 작은 사업체 순으로 퇴직연금 도입률이 낮아진다. 300인 이상 사업체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91.4%인 반면, 5인 미만 사업체는 10.6%에 그쳤다.

금융감독원의 2021년 퇴직연금 관련 통계에 따르면, 여전히 많은 수의 55세

이상 퇴직자가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했다. 2021년에 퇴직연금 수급을 개시한 계좌가 39만7270좌인데 반해, 이중 95.7%인 38만286좌가 일시금 수령을 선택했다.

연금 수령을 선택한 비율은 4.3%(1만6984좌)에 그쳤다. 반면, 연금수령 계좌의 비중은 4.3%임에도 연금 수령액은 전체 적립금 9조3426억원 중 34.3%인 3조2028억원으로 나타났

데, 이는 적립금이 많은 퇴직자는 연금을, 적립금이 적은 퇴직자는 일시금을 수령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발제 발표에 나선 정창률 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퇴직연금이 사적 연금이기 때문에 사적복지 강화가 불평등 확대를 일으킨다’거나, ‘퇴직연금은 일반 금융상품인데, 지나치게 정부의 개입이 들어갈 경우 운영이 잘 안 될 수 있다’ 등의 퇴직연금의 선입견을 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퇴직연금은 사적연금이나, 공적 목적을 위해서 적절한 규제가 이뤄지는 준공적 연금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정 교수는 “현재 퇴직연금이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못하고 있다. 절대 다수가 일시금 수령이나 중도인출 및 해지 통해 적립금을 소진하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퇴직연금은 보편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제 기능을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40년 가입시 20~24%의 소득 대체율로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퇴직연금 자체의 저수익성을 지적하면서 “지속적인 비판이 있었다. 국민연금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익

률을 보였고 이는 적립식 사적연금의 소득보장을 낮추는 역할을 했다”며 “저수익의 핵심적인 이유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대한 선택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퇴직연금 보험료 일부를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을 위해 쓰자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내 논쟁에 대해서 정 교수는 “국민연금의 재정안정과 국민연금 급여의 추가 인상이 가능해지겠으나, 퇴직연금 액수가 줄어드는 것을 근로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와 (퇴직연금 가입이 안 되는) 자영업자와 1년 미만 근속 근로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문제가 있다”며 한계를 짚었다.

정 교수는 “퇴직연금이 공적연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퇴직연금은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유의미한 차선책이 될 수 있다”며 “퇴직연금 발전 방향 설정에 있어 지금까지 금융시장 ‘활성화’ 정책에서 벗어나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고민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 尹 “제2의 중동 붐 위해... 영업사원 각오”

순방 성과 국무위원과 공유  
투자 협력 플랫폼 등 당부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아랍에미리트(UAE)·스위스 순방에서 거둔 성과들과 관련 “양국 간 두터운 신뢰 위에서 ‘제2의 중동 붐’을 일으킬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야 한다”며 “저부터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 신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UAE·스위스 순방 성과를 국무위원들과 공유하고, 후속 조치를 비롯해 수출과 투자 확대 방안 등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취임 첫 UAE 국빈 방문에 대해 “특히 UAE 국부펀드의 300억달러(약 37조원) 투자 유치에 UAE가 어느 나라와도 맞지 않은 압도적이고 전례 없는 규모”라며 “원자력·에너지·방산 등 전통적인 협력 분야는 물론 수소·바이오·스마트팜·디지털 전환·메타버스 등 미래 성장 동력까지 50여 건에 달하는 협력 약정과 계약을 체결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국의 원전 협력 사업이 전세계적인 모범이 되었다”는 모하메드 UAE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며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형제국인 UAE와 함께 바라카 원전의 성공을 토대로 추가적인 원전 협력과 제3국 공동 진출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는 탈원전 정책으로 붕괴 위기에 처한 국내 원전 생태계를 빠르게 복원하고 원전 산업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 중 경제인들과의 간담회에서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한 것에 대해 모든 부처가 영업사원이라는 각오를 가져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나 부처 업무 보고에서 모든 부처가 경제부처, 산업부처라는 인식을 갖고 일해야 된다고 말했다”며 “국무위원 한분 한분 모두가 이 나라의 영업사원이라는 각오로 뛰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글로벌 CEO(최고경영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는 한국에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하면서 제 집무실이 언제나 열려 있으니 편하게 찾아달라고 했고, 한국 투자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기탄없이 얘기해 달라고 했다”며 “국무위원들도 외국 기업 CEO들의 방문을, 바쁘더라도 자주 이뤄지게 하고 그들의 사업상 애로사항을 많이 경청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이 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제 사회에서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며 “규제, 노동 이런 모든 시스템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우리 제도를 정합시켜 나가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투자도 하지 않을 것이고, 또 국제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경쟁을 하기가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우리 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혁신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며 “관계부처는 한국-UAE 투자 협력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플랫폼 구축 등 국부펀드 투자에 관련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해달라. 저도 빠른 시일 내 수출전략회의와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이 사안을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스위스 순방에 대해서도 “다보스 포럼 특별연설에서 공급망, 기후, 보건 위기, 디지털 격차 등 인류 공통의 위기를 극복할 핵심 방향으로 국제사회와의 강력한 연대, 그리고 행동하는 연대를 제안했다”며 “취리히 공대에서 퀀텀 사이언스의 석학들과 함께 미래의 게임 체인저가 될 양자 과학기술에 관한 바람직한 국가 정책과 지원방안에 대해 고견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정의당

## “난방비 폭탄 대책마련 뒷전”

정의당이 최근 대폭 인상된 난방비와 관련 “민생경제 위기 앞에 국가가 없다”며 “난방비 폭탄을 예측하지도, 대응하지도 못한 채 방치해 고스란히 서민들의 경제 부담으로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위선회 정의당 대변인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설 민심 밟상 최고 화두는 난방비 인상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 대변인은 “가스요금의 급격한 상승에 정부는 취약 계층에 지급하는 에너지 바우처 금액을 1만원 상향했다고 밝혔으나, 터무니없는 난방비 폭탄에 그저 생색내기용 정책일 뿐이었음”이라 말했다.

이어 “올해 1분기에는 가스요금을 동결했다지만, 난방비 폭탄을 맞은 시민들의 곡소리는 더욱 높아졌다”며 “시급한 형국에도 현 정부 출신 인사들은 전 정부 탓하기에만 급급한 채 정작 중요한 대책 마련은 뒷전”이라고 비판했다.

위 대변인은 “전 정부 탓할 시간에 언발에 오줌 누기식 정책 말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며 “시민들은 이 경제 위기가 누구 탓인가 보다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가, 정부가 어떤 방안을 내놓을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위 대변인은 “난방비 폭탄에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것은 취약 계층, 저소득 계층”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이어서 중산층 서민들 난방비 지원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2배가 넘게 된 난방비에 기존 복지제도에 속하지 않는 사각지대 시민들 또한 급격하게 늘어났다”며 “금리폭등, 물가폭등 속에 한겨울 난방비 부담까지 더해진 서민들의 체감경제는 낱알이 하루가 다르게 어려워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정익 기자

## 나경원 불출마로 與 경선 구도 ‘출렁’

나경원 “특정 후보 지지 없을 것”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3·8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 구도가 달라졌다. 차기 당 대표 후보군이었던 나경원 전 의원(사진)이 25일 불출마를 선언하면서다. 당초 김기현·안철수 의원과 함께 3자 구도로 경선이 치러질 것으로 예측됐으나 또 다른 후보군인 나 전 의원 불출마로 상황은 달라졌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불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이 더 잘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영원한 당원’의 사명을 다하겠다. 대한민국 정무보수 정당의 명예를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불출마 선언에서 나 전 의원은 “솔로몬 재판의 진짜 엄마 같은 심정이었다”며 “저의 출마가 분열의 프레임으로 작동하고, 극도로 혼란스러워 국민에게 정말 안 좋은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에, 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당대회 불출마) 그만두기로 결정했다”고도 했다.

나 전 의원은 불출마 결정으로 인해 당 대표 경선 구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과 관련, 특정 후보 지지 없을 것이라 는 입장도 밝혔다. 전당대회에서 ‘윤심’(尹心, 윤석열 대통령 의중)이 작용해 불출

마를 결정한 것이라는 해석과 관련 나 전 의원은 “어떤 후보, 다른 세력 요구나 압박에 의해 결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전당대회에 있어 어떤 역할을 할 공간은 없다. 어떤 역할을 할 생각이 없다는 말”이라고 강조했다.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해 전당대회 불출마 선언한 게 아니냐는 메시지인 셈이다. 나 전 의원 불출마 선언으로 이른바 ‘윤심’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되는 김기현 의원에겐 유리한 구도가 형성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을 두고 선 그은 발언이기도 하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